

시진핑 주석 방한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Online Series

2014. 7. 8 | CO 14-09

조한범(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월 3일 이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양국 정상은 회동을 통해 한·중 간 FTA 연내 타결,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개설, 영사협정 및 비자면제 확대, 그리고 미세먼지와 재난구호 협력에 합의했다. 양국 간 경제관계 긴밀화를 확인했지만 북핵 및 일본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을 우회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핵에 확고한 반대의사를 밝혔으나 그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여운을 남겼다. 양국 간 일본 우경화에 대한 합의는 생략되었으나 위안부 문제 공동연구 및 협력 등 상호 공동대응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시 주석 방한은 일본 우경화와 미·일 동맹 강화, 그리고 북·일 교섭 진행 등 동북아 국제정세가 미묘한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미국은 시 주석 방한 전후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금융질서 포석의 하나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한국 참여의 보류를 요청했다. 7월 1일에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변신했으며, 하루 뒤 하와이에서 사상 최초로 한·미·일 합참의장 합동회의가 개최되었다. 한·중 정상회담 당일 일본은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했다.

시 주석은 중국 국가주석 최초로 평양보다 서울을 먼저 방문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친중 라인으로 알려진 장성택 숙청 이후 북·중관계는 이상기류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금년 6월 시 주석 생일에 축전을 보내지 않았다. 시 주석 방한이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의 전조이며,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남북관계 경색 및 북·중관계 냉각을 틈타 북·일교섭을 시도하고 있는 일본은 시 주석 방한을 적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시 주석 방한에 대해서는 과도한 착시나 경계를 넘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미·중 간 패권경쟁과 공고한 미·일 동맹체제에서 북한은 아직 중국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다. 중국의 의도는 북한의 포기가 아니라 충실하게 자국의 안보적 완충지대(buffer zone)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문제를 빌미로 미국이 동북아에 군사적 개입을 확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판단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 인정 등 일본을 아시아 회귀전략 및 대중 안보 대응체제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중국의 우려는 한국이 미·일 동맹체제에 가세함으로써 중국을 포위하는 삼각안보 협력구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시 주석의 방한은 미·일 안보동맹 강화에 대한 대응과 아울러 한국의 동참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핵문제와 일본 우경화 및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현실을 고려한 제한적 협력관계에 수위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중국발 한반도 문제 출구전략

2013년 초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무력시위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의 선제조치인 군사력 전진배치와 역내 미사일 방어망, 즉 MD체제 강화의 명분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외교 안보적 국익의 침해를 감수해야 했으며, 북한 문제로 자국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무력도발을 방지할 경우 미국의 군사적 개입 확대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 출구전략을 주도해야 하는 이유이다. 중국의 대안은 북한의 무모한 무력도발 억제와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북핵문제 안정화로 요약될 수 있다.

2013년 상반기 최룡해 특사의 방중을 통해 중국은 북한에 대해 경고를 보낸 셈이며, 과거

와 달리 북핵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13년 6월 오바마·시진핑 회동을 통해 북핵 불용 입장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국의 행보가 눈에 띄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위협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크다. 북핵문제 악화는 미·중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침해한다는 점에서 양국 간 ‘제한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중국이 6자회담 재개 협상을 주도함으로써 한반도 문제 출구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시 주석의 방한은 북핵문제에 관한 중국의 전략적 선택을 제한적 범위에서 구체화하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일 동맹체제 강화와 한국의 딜레마

미국은 아시아 회귀전략의 구체화를 위해 미·일 동맹체제를 핵심구도로 아시아 각국의 협력을 견인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아시아 회귀전략의 실행을 위해서는 역내 미 군사력의 전진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산 자동삭감조치인 시퀘스터를 비롯한 재정적 압박으로 미국은 아시아지역 군사력 재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일본의 외교안보 역량의 확대와 미·일 동맹체제 강화과정에 한국의 참여를 원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참여가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 및 과거사 등 현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한·일 간 안보협력은 국민 감정상 제약이 있으며,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한국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미·일 동맹체제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편입될 경우 대중국 외교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일 동맹체제에 맞서 중·러 간 협력관계가 확대됨으로써 신북방 3각 구도 형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는 중국은 물론 시베리아·극동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러시아에도 부담이라는 점에서 양국 간 공동협력의 필요성과 아울러 북한이 이 구도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북한의 대남 유화전략

최근 남북교류는 재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월 4일 통일부는 5.24 조치 이후 최초로 민간단체의 대북농업지원을 승인했다. 6월 6일 북한 조평통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포함하는 포괄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했다. 6월 10일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 엔트리(150명)를 제출한 데 이어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참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월 25일 거래말근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관계자가 개성을 방문했으며, 6월 26일에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가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당일 거래의 숲 관계자도 개성을 방문하여 남북 산림협력을 논의했다. 시 주식 방한 직후 북한은 이례적으로 최고 형식인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인천 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과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천명했다.

체제안정화를 위한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북·러, 북·일관계 개선 등 대외관계 개선과 특구정책을 통해 제한적 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대중국 관계 냉각에도 불구하고 최대 후원자인 중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문제 출구전략에 동참해야 하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 6자회담 재개국면이 도래할 경우 북한이 대남 강경태도를 견지해야 할 필요성이 적어진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안정을 위한 자원의 유입이라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2013년 상반기 이후 북한의 대남 도발은 실질적 위협 보다는 중·저강도 수준에 머물렀다. 북한은 개성공단사업 재개를 위한 협상국면에서 과거와 달리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개성공단사업 재개 합의 직후 북한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하는 실무회담을 제의,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의사를 숨기지 않았다. 금년 초 한·미 군사훈련 진행상황에서도 북한은 이산가족상봉에 응했으며, 자신들의 ‘통 큰 결단’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의 양보를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따라서 최근 북한의 대남 유화조치는 일시적이거나 위장공세의 성격을 넘은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남북관계개선을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와 5.24 조치의 해제를 유도함으로써 체제 안정화를 위한 자원의 확보가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최근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동북아 국제정치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국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필요하다. 한·미 동맹체제 및 미·중 간 패권경쟁 구도 속에서 북한은 여전히 중국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며, 한·중 간 외교안보 협력의 확대에 제약이 있다.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한·중 간 경제관계의 긴밀화와 아울러

북핵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국 국익의 완충지대가 북한을 넘어 한반도 전체라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미 안보협력이 한반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과 북한의 무력도발 대응에 국한된다는 점에 대해 중국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 대응한 한·중 협력은 전략적 판단에 기초해야 한다. 미·중 패권경쟁구도와 북한문제에 대해 양국 간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중의 대일 공동전선 형성은 고비용 구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우경화와 과거사 인식문제는 미국 및 세계 각국의 민주세력과 연대의 강화를 통해 대응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미·중의 북핵문제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와 한국의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13년 6월 발표된 북핵문제에 대한 오바마·시진핑 간 합의는 “북한의 추가적인 핵 능력 개발 방지 및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이라는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핵의 궁극적 폐기와는 거리가 있다. 금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은 북핵문제에 대해 수위를 유지했다. 미·중의 경우 북핵문제 악화 방지 및 적정수준의 안정화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이 6자회담 참여와 아울러 일정수준의 비핵화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북핵 동결 및 비확산, IAEA 사찰단 복귀, 그리고 영변경수로 건설 중단은 북한이 협상용 ‘살라미’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이다. 대북제재국면의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미 공개된 영변 우라늄농축시설의 폐기도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북한은 과거 핵 유지 및 은닉된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할 수 있다.

한국은 6자회담이 비확산 및 동결 수준에서 장기화하거나 북한의 과거 핵이 암묵적으로 용인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KAMD) 구축에만 의존할 경우 북핵에 대해 완벽한 역지가 어려우며, 중심이 짧은 한반도 전장 환경상 대응에 한계가 있다. 아울러 미국 미사일 방어망(MD)체제로의 편입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한국은 비핵화 원칙 및 궁극적 폐기 입장을 고수해야 하며, 잠정적 안정화가 아닌 실질적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건인해 내야 한다.

남북관계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가속화를 위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의 확대는 목표가 아니며 수단이다. 남북교류를 수단화해온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를 직시해야 하며, 단기적 성과주의의 지양과 아울러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포함하는 전략적 목표 달성에 주력해야 한다.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중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국가발전과 통일을 위해 한·미 동맹과 한·중관계 모두 필수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KINU 2014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